

전주매일



2016년 **12**월 **14**일 **수**요일 (음 11월 16일) 제1705호

www.jjmaeil.com

대표저하(063)288-9700

누리과정 예산 해법

도의회 '찾았다' 교육청 '글쎄다'

도의회 예결특위 불요불급 예산 삭감 762억원 증액 의결

교육청, 심사기간 중 전북도와의 논의서도 편성 불가 입장 고수

전북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더 이 상의 누리과정 예산 미편성으로 인한 도민들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도교 육청의 불요불급한 예산을 삭감해 누 리예산 762억원에 대한 증액을 의결했다.

도의회 예결위에 따르면 지난 12일 2017년도 전북도 예산 5조1,485억원과 도교육청 예산 2조8,474억 원, 2016년 도 도 추경예산 5조9,477억원과 도교 육청 추경예산 2조9,028억원을 심의 의결했다.

이번 예산안 심사의결의 가장 핵심 은 역시 누리과정 예산이였다.

17개 시도 중 유일하게 2016년 어린 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미편성한 도교 육청은 심사기간 중에도 이어진 도와 의 논의에서 편성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이에 따라 영세 어린이집의 줄도산과 보육교사의 퇴직은 물론 가정형편이 어려운 서민자녀들의 어린이집 중도포기 사태가 재차 우려되는 상황이었다.

설상가상으로 교육부는 올해 어린이 집 누리과정 예산을 한 푼도 편성하지 않은 도교육청에 내년 교부금 감액, 지방채 불승인 등 총 1,400억 원 규모의 지원 중단을 재차 밝혀 가뜩이나지방재정이 열악한 전북도에서 1,400억원이 날아갈 위기에 처했다.

전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어린이집 아이들과 학부모, 보육교사 등의 피해를 막고 전북도교육청의 예 산손실을 막기 위해 도교육청 2016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신규로 편성함으 로써 전액 이월될 예정인 본관 옥상방 수 사업 등 996건, 757억4,200만원과 예비비 4억5,800만원을 삭감해 762억 원의 재원을 마련하고 어린이집 누리 과정 예산을 증액했다.

올해 누리예산을 편성하게 되면 2017 년 감액예정인 교부금 762억원 등 교 육부로부터 1,400억 원의 예산을 지원 받을 수 있게 된다.

다만, 이를 위해서는 14일 전북도의 회 제2차 정례회 폐회시 김승환 교육 감이 증액된 예산안에 대해 동의를 반



탄소클러스터 조성 예타 확정

진홍 정무부지사는 13일 도청 지방기자실에서 탄소밸리 2단계 사업인 메가탄소밸리 사업(이하 '탄소산업 클러스터 조성사업') 예타확정과 관련된 브리핑을 가졌다.

〈관련기사 2면〉

드시 해야 한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지난 1일부터 12일까지 8차에 걸쳐 전북도 2017년도 예산안 총 5조2,644억원 중 전북연구원 출연금 8억원 등 84건 100억 원을 삭감해 5조1,485억원으로 조정했고, 2016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은 수정예산안 5조9,477억 원을 원안 가결했다.

또한, 도교육청 2017년도 예산안 총 2조8,621억원 중 교육감 공약 관리 등 83건147억원을 삭감해 2조8,474억 원으 로 조전했다.

특히 201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은 신규로 편성함으로써 대다수 예산이 이월될 예정인 옥상방수 사업 등 불요 불급한 예산을 삭감해 마련한 762억원을 누리예산에 증액한 5조9,028억 원으로 가결했다.

김대중 예결위원장은 예산안 심사와 관련 "성과가 미흡한 사업, 선심성·낭비성 사업, 사전절차 미이행 사업, 추계가 정확하지 않은 사업 등을 심사하는데 중점을 뒀고, 특히 누리예산을 17개 시도 중 전북도만 미편성함으로써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민들을 생각해 누리예산 문제는 꼭 해결하고 싶었다"고 말했다.

이어 김 위원장은 "타시도에 비해 여러 가지로 열악한 전북도의 현실 속에서, 누리과정 예산으로 우리도 민만이 피해를 보는 것을 막겠다는 일념하에 예결위원님들과 힘을 모았다"며, "향후에도 도민들이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예산결산특별위원 회는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덧붙였다.

다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강력한 권고에도 불구하고 도교육청은 2017년 도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정부에서 내시한 예산 전액(740억)을 편성하지 않고 5개월분에 해당하는 307억 원만을 편성함으로써 학부모나 어린이집 모두 상생하는 방안을 외면하고 누리과정 갈등이 완전히 해소되지 못한체과제로 남았다. /안재용 기자

군산쌀, 서울 학교급식 공급확대 총력

농가 소득 증대에 효과가 큰 서울 시 학교 급식용 군산쌀 공급량이 매 년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내면도 공급량 확대를 위해 군산시 가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군산시는 지난 2010년도부터 수도 권 학교급식에 군산쌀을 공급하기 시작해 매년 공급량을 확대하고 있 으며, 그 결과 2010년부터 2016년까 지 7년간 총 3523톤 (95억원)의 친환 경 쌀을 공급하고 있다.

이런 기운데 지난 8일 2017년도 친환경 쌀 학교급식 공급업체 대상자 선정을 위한 품평회가 열렸다.

노원구청에서 열린 품평회에는 10 개 공급 업체와 평가단 등 120여명이 참석했다.

그 결과, 옥구농협(조합장 고석중) 이 출품한 '못잊어 신동진'이 노원 구 평가단의 입맛을 사로잡아 군산 친환경 쌀이 공급업체로 선정됐다. 또한 지난 12일 서울 금천구에서도 2017년도 친환경쌀 학교급식 품평회 가 열려 서류 및 현장 평가 등의 예 선을 거쳐 올라온 7개 업체가 참여 한 가운데 '군산 신동진(옥구농협 출품)쌀이 노원구에 이어 금천구에 서도 선정되는 쾌거를 이뤘다.

이에 따라 군산시는 노원구에는 2 년간 80톤(2억원)과 금천구에는 4년 간 200톤(5억원) 등 총 280톤을 내년 3월부터 공급하게 된다.

/군산=문정곤 기자

Al 방역대책 '역대 최악' 박근혜와 함께 '탄핵감'

정부의 안이한 인식과 늑장대응 으로 AI 피해가 사상 최악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13일 더불어민주당 김철민 의원에 따르면 지난 11일 24시 기준 전국 7개시도, 23개 시·군에서 AI 첫 발생 이후 채 한 달도 안 돼 1,041만9,000수에 달하는 가금 류가 살처분·매몰됐다.

상황이 심각하자 정부는 12일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AI 관 계장관회의를 열고 범정부적 대 응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 혔다.

그동안 농림부 차원의 안이하고 소극적인 방역대책으로 일관해 왔음을 자인한 셈이다. 다

또한 현 정부의 AI 살처분 가금 류 규모는 2,972만 9,004수에 달한 다. 이 같은 수치는 2011년 이후 전체 발생분의 81.9%에 달하는 막대한 규모다.

정부의 AI 방역대책은 역대급 최악이라는 지적 속에 농민들의 탄식 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번 고병원성 AI 바이러스도 정부의 방역체계가 아닌 민간 대 화연구팀에 의해 발견됐다.

지난 10월 28일 건국대 수의과 대학이 자체 연구목적으로 충남 천안시 풍세면 봉강천에서 야생 원앙 분변을 채취, 연구하는 과정 에서 AI 바이러스 검출을 확인해

지난달 고병원성 AI, 정부 아닌 민간 연구팀에 의해 발견 발생 후 현재까지 가금류 1041만9000수 살처분·매몰 정부 차원의 확인 있기까지 15일 소요 방역공백 발생 정부 '사후약방문' 식 대응·농림부는 매번 '철새 탓' 만

정부는 전국 가금 관련시설, 차 량 등에 대해 일제 소독을 실시 한 후 13일 00시부터 14일 24시까 지 48시간 동안 전국 가금류 일 시 이동중지 명령을 발동했다.

지난 11일 현재 전국 127농가가 고병원성 AI 양성 확진판정을 받 았다. 검사중이거나 음성, 검사 전 농가 등 예비적으로 살처분 · 매몰한 농가수는 228개, 887만 8,000수이고, 잔여 14농가의 154 만1,000수가 예정돼 있다.

이들 살처분·매몰한 가금류의 축종별로 보면, 닭 677만9,000수 (사육대비 4.4%), 오리 133만3,000 수(15.2%), 메추리 76만6,000수 (5.1%)로 나타났다.

현재까지 살처분 보상금 예산소 요액은 350억원에 달한다. 2016년 가용예산은 186억원(지급 111억 원, 잔여 75억원)에 불과하다. 2011년 이후 현재까지 6년동안 고병원성 AI로 인한 살처분・매 몰 가금류는 총 3,626만4,715수에

달한다. 특히 같은 기간의 살처분 총가 금류의 28.7%에 달하는 총 1,041 만9,000수가 최초 발생이후 한달 도 채 안된 기간에 발생한 것이 11월 10일, 농립축산검역본부로 해당 시료를 발송했다.

11월 11일 H5N6형 AI 바이러스 가 확인됐으나 결국 시료채취 후 정부차원의 확인이 있기까지 약 15일이 소요되면서 방역공백이 발생한 셈이다.

정부차원에서 고병원성 AI 바이러스임을 확인한 지 열흘이 지나서야 위기경보 격상과 전국단위 방역(전국 단위 이동중지)대책은이미 방역망이 뚫린 뒤 내놓은 사후약방문식 대처라는 비판을면키는 어렵게 됐다.

또한 매번 철새 탓만 하는 농림 부의 안이한 인식도 피해를 늘렸 다는 비판이다.

지는 미란이다.
김 의원은 향후 차단 및 방역시스템에 대해 "중앙정부와 지 방정부에 수의직 구축, 조기경보 체계 재정립, 여름부터 농장검사, 방역원칙 절대준수, 새로운 전략의 방역방법에 대한 RkD, AI교육 전국단위로 정규칙으로 실시, 개인감염 차단방안개발, 야생조류 위치정보 종합관리사이트 구축으로 AI 방역에 활용하는 방안이 강구돼야 한다"고 말했다. /안재용기자

▶ 매일 INDEX

3면 "스스로사임할기회도놓쳤다"

16면 올 한해 전북도정 결산

